美 상원마저 공화당 우세 오바마 레임덕 빠지나

오늘 중간선거…8년만에 與小野大 정국 유력

한·미관계, 대북 정책 등엔 큰 변화는 없을 듯

미국 정치권의 권력 지도를 바꿀 '11·4 중간선거' 결과에 미국 내를 비롯한 전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선거를 대하는 미국 유권자들의 관심은 과거보다 크게 떨어졌지만, 버락 오바마 대통령 2기 임기 전반 2년에 대한 심판인 동시에 2016년 차기 대권의 기상도를 가늠할 방향타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워싱턴DC 정가 예상대로 야당인 공화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면 오바마 대통령은 급격한 레임덕(권력누수)에 빠질 공산이 크다.

반면, 민주당이 상원 다수 의석을 유지하면 오바마 대통령은 임기 막바지까지 국정 주도권을 쥐고 이민개혁, 최저임금 인상 등의 핵심 어젠다를 추진할 동력을 확보하게 된다.

미국 선거 전문가와 정치 분석가들은 선거운동 막바지인 2일(현지시간) 현재까지도 판세가 여전히 공화당에 유리하다고 분석한다.

435명(공화 233석, 민주 199석, 공석 3석) 전원을 새로 뽑는 임기 2년의 하원의원 선거는 물론이고 100명(민주 55석, 공화 45석) 가운데 36명을 교체하는 임기 6년의 상원의원 선거 역시 공화당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앞서고 있다.

역대로 미국의 중간선거 자체가 집권 여당에 불리한데다 집권 6년차인 오바마 대통령의 국정 운영 기조에 대한 실망감이 겹쳐 지지율이 급락한 탓에 민주당이 고전을 면치 못하는 것이다.

공화당은 이에 따라 하원 장악력을 확고하게 하는 동시에 상원까지 탈환하기 위해 경합 지역에 선거자금과 인력을 집중하고 있고, 민주당은 상원만이라도 지키려 안간힘을 쓰고 있다.

상원 선거가 치러지는 36곳 중 치열한 접전이 벌어지는 지역구는 13개로 공화당이 현역인 곳이 3개, 민주당이 현역인 곳이 10개다.

따라서 공화당이 3곳을 지키고 민주당 현역 지역구 중 6곳을 빼앗으면 상원 다수당이 된다. 이 가운데 몬태나, 웨스트버지니아, 사우스다코타, 알래스카, 아칸소는 사실상 공화당에 넘어갔다는 평가가 많고 나머지 지역에서도 양당 후보들이 엎치락뒤치락하고 있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현재 공화당의 상원 장악 가능성을 70%, 워싱턴포스트(WP)는 95%로 보고 있다.

물론 민주당이 가까스로 다수 의석을 지키거나, 50 대 50 동석이 나오거나(동석일 때는 상원 의장인 조 바이든 부통령이 캐스팅보트 행사), 일부 지역구에서 결선투표 등이 치러져 당일 승패가 판가름나지 않을 것이라는 경우의 수도 있다.

공화당은 밋 롬니 전 대통령 후보를 비롯해 2016년 대권 잠룡들을 대거 동원해 초반부터 유지해 온 '우위 구도 굳히기'에, 민주당은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 등 전국구 인사들이 모두 나서서 '막판 뒤집기'에 사활을 걸고 있다.

현재 흐름대로 공화당이 상·하원을 동시에 장악하면 2006년 조지 W 부시 공화당 정부 때 민주당이 양원을 차지한 이래 8년 만에 명실상부한 여소야대(與小野大) 정국이 도래하게 된다.

공화당이 상원 다수당이 되면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점유한 외교위, 군사위, 세출위, 금융위 등 '슈퍼 A급' 상임위원회를 포함한 상임위원장 자리를 모두 빼앗는 등 지도부 개편이 뒤따른다.

중간선거가 끝나면 남은 2년간 자신의 '임기 내 업적'을 쌓아야 하는 오바마 대통령이 그동안 그랬던 것처럼 공화당과의 타협을 거부하고 각종 현안에서 극한대치 정국을 이어갈지, 아니면 협상과 대화를 통해 세제, 에너지, 이민개혁 등 여러 부문에서 그랜드바겐(대타협)이나 빅딜을 추진할지도 관심사다.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은 이번 중간선거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건 한·미 관계나 오바마 행정부나 의회의 대(對) 북한 또는 한반도 정책 및 전략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한다. /연합뉴스

英 상업용 우주선 시험비행중 폭발

미 우주화물선 추락 이어 발생 민간 우주개발 사업 악재

미국의 무인 우주화물선이 폭발한데에 이어 영국의 상업우주여행사 버진 걸럭틱이 개발한 상업용 우주여행선이 지난 31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모하비 항공우주기지에서 시험비행 중 폭발해 추락했다.

이 사고로 '스페이스십투'로 명명된 우주선 안에 타고 있던 2명 중 부조종사는 숨지고 조종사는 크게 다쳤다. 이는 민간 우주개발 업체인 오비털 사이언시즈의 로켓이 미국 버지니아주에서 발사 직후 폭발한 지 사흘 만에 발생한 사고로, 민간 우주개발 사업에 악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버진 걸럭틱은 사고가 나자 소셜미디어인 트위터를 통해 "스페이스십투가 시험비행 중 심각한 기체결함이 발생했다"면서 "회사는 정확한 사고원인을 규명하는데 최대한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버진 갤럭틱이 밝힌 심각한 기체 결함은 우주여행선을 수송하는 로켓 엔진에서 불이 붙으면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NBC 방송은 전했다.

영국 버진그룹의 자회사인 버진 갤럭틱은 당초 2011년 운항을 목표로 했으나, 그동안 개발 일정 지연과 안전상의 문제가 드러나 여러 차례 연기한 바 있다.

버진 갤럭틱의 우주여행 계획에 따르면 승객 정원 6명의 이 우주여행선은 수송기에 실려 14㎞ 상공에 도달한 다음 자체 동력을 가동해 성층권 밖 궤도를 돌고 귀환하게 된다.

2시간 정도 지구 상공 100㎞ 궤도를 비행하는 이 우주관광 상품의 가격을 25만 달러(약 3억원)로 알려졌다.

특히 애쉬튼 커처,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톰 행크스, 브래드 피트와 안젤리나 졸리 등 할리우드 톱스타와 영국의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 등이 탑승자로 확정돼 화제를 모았다. /연합뉴스

북한 인권유린 실태 ICC회부 피하기 안간힘

〈국제형사재판소〉

유엔결의안 채택 앞두고

북한의 인권 상황이 국제형사재판소(ICC)에서 다뤄지는 것을 피하려고 북한이 총력전을 펴고 있지만, 무위에 그칠 공산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열악한 인권 상황을 개선하겠다는 북한의 진정성이 보이지 않는데다 이미 결의안 채택을 위한 절차가 본궤도에 오른 상황이어서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핵심 내용을 변경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유엔의 한 외교소식통은 "북한이 예년과 달리 유엔 총회 결의안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면서 "이전과 달리 이번 결의안에는 북한의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서 다루도록 권유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이라고 2일(이하 현지시간) 설명했다.

유럽연합(EU)과 일본이 공동으로 작성하고 50여 개국이 문안 수정 작업에 동참해 만든 결의안은 총회가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보고서를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전달해 안보리가 COI의 권고를 따르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COI의 권고대로 북한 인권 유린 실태를 ICC에 회부하고, 인권 유린 책임자들을 제재하자는 것이다.

이 소식통은 "북한이 결의안에서 'ICC 회부'라는 표현을 빼려고 노력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50여 개국이 공동으로 초안을 만든 상황에서 이해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지 않은 한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한은 지난달 27일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북한 방문을 허용하겠다는 뜻을 밝힌 데 이어 지난달 30일에는 스타브로스 람브리니스 EU 인권특별대표의 내년 3월 방북 허용을 제안했다. 대신 유엔 총회 결의안에서 북한 인권 상황을 ICC에 넘기도록 하는 내용의 삭제를 조건으로 내걸었다.

북한은 이런 유화적인 행동을 취하면서 ICC 회부를 포함한 결의안 채택을 강행한다면 "예측할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국제사회에 경고하기도 했다.

앞서 EU도 이미 결의안에서 'ICC 회부'를 빼 달라는 북한의 제안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소식통은 "결의안이 위원회에 상정된 만큼 시간이 갈수록 결의안 수정은 어려워질 것"이라면서 "위원회에서는 아주 테크니컬한 부분만 수정되는 게 관례"라고 전했다. /연합뉴스

기적이 일어났어! 하와이 빅아일랜드의 파호아 마을을 향해 진격해오던 킬라우에아 화산 용암이 1일(현지시각) 마을 중심도로를 불과 150m 앞두고 흐름을 멈춰 더 이상 전진하지 않고 있다. /연합뉴스

홍콩 야권, 의원직 집단 사퇴 검토

행정장관 선거안 철회 위해

홍콩 야권이 2017년 행정장관(행정수반) 선거안을 철회시키기 위해 의원직 집단 사퇴 검토에 들어갔다고 2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홍콩의 국회격인 입법회의 범민주파 의원들은 전날 대학학생회 연합체인 홍콩전상학생연회(香港專上學生聯會·학련) 등 시위대와 만나 야권의 의원직 사퇴를 통해 사실상의 총선거를 실시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렁콕훙(梁國雄) 사회민주연선 주석과 에밀리 라우 와이-힝(劉慧卿) 민주당 주석 등이 집단 사퇴에 동참할 의사를 밝혔지만, 야권이 사퇴하면 여당이 단독으로 선거안을 통과시킬 가능성이 제기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선거에서 야권이 패배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도 개진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는 별개로 36일째 도심 점거 운동을 주도하는 시민단체 '센트럴을 점령하라'(Occupy Central) 공동 대표인 베니 타이 이우-팅(戴耀廷·50) 홍콩대 법대 교수는 전인대가 의결한 선거안이 입법회에서 부결되면 렁춘잉(梁振英) 행정장관이 의회 해산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파키스탄 자살폭탄 테러…55명 사망·120명 부상

인도와 국경을 맞댄 파키스탄 동부 라호르 인근 국경검문소에서 2일(현지시간) 자살폭탄 테러가 발생, 최소 55명이 숨지고 120명 이상 다쳤다고 경찰이 밝혔다.

자폭공격은 이날 해질 무렵 라호르 인근에 있는 와가 국경검문소의 파키스탄 쪽에서 매일 장중하게 펼쳐지는 국기하강 행사를 보려고 8000여명의 인파가 몰려 있는 와중에 일어났다.

경찰간부 아즈말 부트는 10대로 보이는 자살폭탄 테러범이 자신의 몸에 두르고 있던 폭약을 터트렸다고 말했다.

이번 테러는 이슬람 창시자 무함마드의 손자 이맘 후세인의 순교(서기 680년)를 애도하는 아슈라를 맞아 파키스탄 전역에 비상 경계령이 내려진 가운데 발생했다. 자폭테러 희생자 중에는 2명의 무장순찰대원, 여성, 어린이가 다수 포함됐다. 테러를 자행한 주체에 대해 파키스탄 당국의 공식 발표가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알카에다와 연계된 무장세력 3곳이 자신의 소행이라고 주장해 혼선을 빚고 있다. /연합뉴스